

December 20, 2019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14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19. 12. 12. ~ 12. 18.)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국회에서 예정된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을 첨부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공정위1]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 시행

2019. 12. 12. 표시 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 주요 개정 내용으로 ① 소비자 오인성 요건 판단기준의 세부화, ②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 추가, ③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등이 있음

[\[참고자료\] 부당 표시광고 행위유형 고시 개정안 시행](#)



[공정위2]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2019. 12. 16.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정신청권 확대, ②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 대상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은 1년간 공정거래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③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공분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 및 낙찰금액을 입찰참가자들에게 공개 의무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2019. 12. 11.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①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②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논의, ③ 2020년 정부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일자리함께하기'(660억), '청년추가고용장려금'(9,919억원), '장년고용지원사업'(276억원) 추진 예정

[\[참고자료\]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참고자료\]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계획](#)



[산자부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2019. 12. 13.부터 혁신성이 인정된 R&D 제품을 공공기관 수의계약으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함. 본 제도는 2019. 3.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판로지원과 혁신제품 도입을 통한 정부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가 R&D를 수행한 결과로 제조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임.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직접 수의계약 또는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참고자료\]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공고](#)



[산자부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 12. 17. 친환경 선박의 개발 보급 확대 추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친환경선박의 개념에 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을 포함, ② 친환경선박 전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여러 선종으로 확대, ③ 공공선박에 대해 법 시행일인 2020. 1. 1. 이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 구입 의무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조선해양플랜트과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지원 확대 조선해운산업 지속적 발전 기대](#)



[과기부1] 중국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안) 등 확정

2019. 12. 13. 중국의 IP 정책 제도 변화를 분석하여 중국과의 IP 분쟁 해결 등에 적극 활용하고 미래 기술패권 경쟁을 대비하는 IP 정책 방향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분야를 기존 특허 영업비밀에서 상표 디자인으로 확대, ② IP 침해 피해 배상금액 증액, ③ IP-DESK 해외저작권센터 등 해외 지식재산지원 기관 간 협력, 정부 간 협의채널 등을 통해 중국 내 IP 분쟁 지원 강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2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과기부2] AI 국가전략 발표

2019. 12. 17. AI를 통해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도약을 위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조 96억원 투자, ②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③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수립, ④ 5조원 이상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한 AI 투자 펀드 조성 등이 있음

[\[참고자료\]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참고자료\] 별첨_인공지능 국가전략](#)



[과기부3] 선도적 융합기술 개발에 321억원 투자 예정

2019. 12. 17. 과학난제 도전 융합 연구개발, 인간증강 융합기술 개발, 현안 해결을 위한 융합기술개발 등에 총 321억원을 투자하는 '2020년도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함. 주요 내용으로, ① 새로운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는 '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개발사업' 신규 추진(480억원), ② 전통기술의 과학적 원리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에 추진(73억원), ③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인지 육체 사회적 능력을 강화하는 '휴먼플러스융합연구개발챌린지사업' 추진(38억원) 예정

[\[참고자료\] 2020년도 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기재부1] 조달규제 합리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공포

2019. 12. 18. 공공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토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함. 주된 내용으로 ① 계약의 잔여이행기간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금지급 허용, ②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인 경우 착공신고서 및 월별 공정보고의무 면제, ③ 착공준비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상으로 연장, ③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 관련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기재부2]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 개최

2019. 12. 16.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인프라 관련 협력강화를 통한 수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함. 특히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는 특별계정(국가개발프로젝트)을 활용한 최초의 초고위험국 지원사업인 나이지리아 액화플랜트 수출사업(총사업비 57억불)을 지원할 예정임

[\[참고자료\] 제9차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 및 건설기업 간담회 개최](#)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법적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이 필요함에도 제재하지 못하거나 계속·반복적으로 위법행위에 관여하는 부정수급에 가담한 계약업체 등을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현행법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기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보조사업의 소관 부처에 따라 지급제한 기간이 현저히 다르게 적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부결정의 취소나 반환명령이 없더라도 부정수급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제31조의2 제1항 제4호 신설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제21조 제4항 삭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화학물질 정보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되고 있음. 현행법 체계상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정보가 비공개 된다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정보는 비공개 되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산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제14조 제8호 단서 신설 등)

3. 주요 국회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

개최일시	토론회명	개최의원	장소
12. 23. 10:00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정책토론회	정은혜(민)	회관 제8간담회실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